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 179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립학교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사유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243, FAX 042-270-5249, E-mail : 1052jjh@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교부목적 외의 사용금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4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교부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교부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p>1.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p> <p>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p> <p>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p> <p>4.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p> <p>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p> <p>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p> <p><신 설></p>	<p>제5조(교부목적 외의 사용금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제4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을 그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제5조의2(교부결정의 취소)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법인 또는</p>

사립학교 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교육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교육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 번	발 의 의 원	서 명	비 고
1	한 재 영		
2	박 영 화	박영화	
3	박 제 연	박제연	
4	김 중 천		
5	박 상 숙		
6	전 문 익		
7	정 기 현	정기현	
8	김 동 생	김동생	
9	구 비 정		
10	김 정 서		
11			
12			
13			
14			
15			